

## 북한의 정치·경제상황과 동북아 안보

Marcus Noland

### 개관

이 논문은 각종 수치와 통계자료 그 자체가 시사하는 내용 및 동료들과 함께 구축한 모형을 통해서 얻은 결과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온 자료들을 취합하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데,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북한 경제에 관한 한, 통계수치를 위시한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지시켜 드리고 싶다.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미국이나 한국의 지난 분기의 국내총생산(GDP) 통계와는 달리 그 신뢰도가 크게 낮다. 실제로 필자는 현재 ‘정밀한 추측(Rigorous speculation)’이라는 제목의 학술논문을 집필 중에 있다. 그 내용은 오늘 여기서 발표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논문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의 실물경제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경제는 매우 왜곡되어 있는 경제다.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왜곡되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경제개혁을 한다면 북한에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에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득은 대단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생산 및 고용의 구성을 크게 바꿀 때에만 가능하다. 말 그대로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외무역,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은 크게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양국과의 외교관계는 여전히 문제투성이다.

더욱이 북한에서 경제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곳 아시아에서는 소위 중국모형이나 베트남모형과 같은 ‘아시아 모형’에 관한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는 중국의 모형도 베트남의 모형도 적용될 수

가 없다. 북한의 경제구조는 이들 양국보다 훨씬 더 공업화되어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는 경제개혁을 시작할 당시 농업국이었던 1979년의 중국이나 1989년의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보다는 오히려 동유럽국가나 舊소련 등의 경제와 더 유사하다. 또 다른 난제는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어려운 이데올로기 문제를 아직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戰에서 월맹이 승리하면서 현재 그곳은 베트남人(Vietnamese)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독자적 단일정부가 들어섰다. 중국의 경우에도 아무도 대만이 본토 정부에 대해 이데올로기 도전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그 동안의 경제실적이나 규모 면에서 한국보다 열세에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마르크스, 모택동, 호치민과 같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시장중심적인 개혁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렵사리 합리화시킬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 이러한 합리화가 일어나려면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주체사상을 시장중심의 개혁과 외부세계, 특히 한국에 대한 개방확대로 재해석하는 일은 북한에게는 커다란 난제가 될 것이다. 왕조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북한의 통치체제는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이유들로 인해 북한경제의 성공적인 개혁은 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하겠다.

실제로 지난 약 반년 사이에 북한에서 나온 신호들은-비록 혼란스럽기는 하지만-북한정부는 진정한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회의 물질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이 없다면 북한은 과연 어떻게 될까? 쫓기는 입장에 있는 조직이나 제도는 일반적으로 개혁을 위해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세를 관망하거나 기존의 전략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속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경우 그 대응 전략은 두 가지 형태를 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북한경제의 기본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화획득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특구의 설치가 포함된다. 즉, 완전히 분리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북한 경제나 사회의 다른 부분에 거의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내가 보

기에는 금강산 개발계획도 이런 유형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즉, 실제로 제도개혁을 추진할 필요없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셈이다.

또 다른 대응전략은 대외적으로 강탈에 가까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를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대응전략들은 통치구조가 취약하면서도 위험기피적일 때 국내적으로 가장 동원하기 쉬운 전략들인데, 대외적으로도 역시 위협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1998년 12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지금부터는 이런 결론들을 구체화시켜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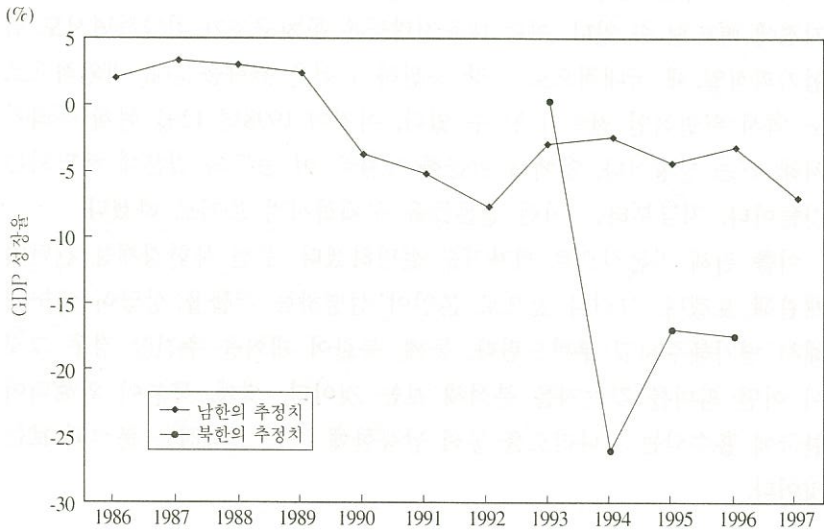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세가지를 설명하겠다. 우선 북한경제를 간단히 개관해 보겠다. 그러나 앞으로 본인이 설명하는 것들을 상당히 예누리해서 평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경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와해되어 한국에 흡수되는 시나리오를 통해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 북한의 경제상황

경제학자들이 한 국가의 경제를 개관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를 추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그 이유를 여기서 상세히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국민소득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추정자료는 그 오차범위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1>은 북한의 소득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제일 위쪽에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추정치이다. 급하강하고 있는 두 번째 선은 북한정부의 공식적인 추정치인데, 여러 가지 공식적인 추정치들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작년에 국제통화기금이 평양에 파견한 직원들에게 북한당국이 제공한 자료이다. 성장율에 관한 이들의 통계수치들 간에는 차이가 매우 커서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 수치들은 모두 북한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모든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1〉 북한의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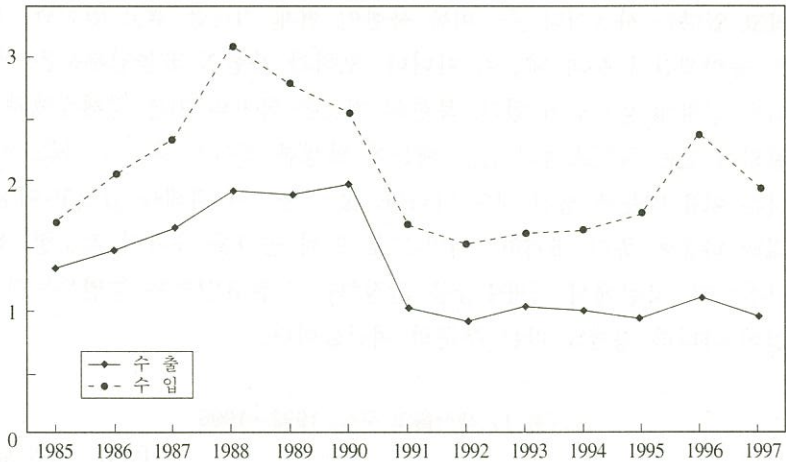


〈그림 2〉의 무역통계는 북한의 경제 실상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 자료는 국제통화기금의 무역통계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남북한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동 자료에 의하면, 멕시코는 몇해 전에 느닷없이 북한으로부터 5억 달러 상당의 TV와 자동차 타이어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는 멕시코 통계국 직원이 남북한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세계의 몇몇 국가들은 아직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수치들은 주의 깊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그림은 북한이 안고 있는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북한의 실질교역량이 감소하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경제는 병들어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

〈그림 2〉 북한의 무역추이

(단위 : 10억 달러)



한 근처의 다른 나라들, 즉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 또는 좁은 해협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일본 등의 경우 모두 건강한 경제상태로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수입이 언제나 수출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무역적자는 어떤 식으로든 메꿔져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북한이 이를 어떤 방법에 의해 해결하고 있는지를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즉 불법 행위, 은밀한 무기수출, 화폐위조, 또는 밀수 등을 통해 수입대금의 상당 부분이 조달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외교관들이 현지에서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주재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기도 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은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송금에도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두가지 사실들은 북한의 무역량이 건강한 경제를 지닌 국가들에서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은 북한의 생산물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 자료 역시 북한정부가 IMF에 제출한 공식자료이며, 그 수치를 많이 가감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주요한 사

항이 하나있다. 만약 이 데이터가 현재 북한의 실상을 대체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볼 경우 그 핵심은 북한경제가 농업을 중심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비록 북한이 현재 기근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농업생산의 붕괴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非농업부문은 현재 더욱 심하게 붕괴되어 있다. 북한의 기근은 국가의 기본 경제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소득의 급감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홍수나 가뭄,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많은 농토가 피해를 입었고-이점에 대해 나중에 좀더 얘기하겠지만-그로 인해 농산물 수확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에서 식량수급을 결정하는 근본요인들은 농업부문의 여건이 아니라 경제내 다른 부문의 여건들이다.

〈표 1〉 생산물의 구성, 1992~1996

(단위 : 백만 달러)

|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 합 계 | 20,875 | 20,935 | 15,421 | 12,802 | 10,588 |
| 농 업 | 7,807  | 8,227  | 6,431  | 5,223  | 4,775  |
| 공 업 | 4,551  | 4,689  | 3,223  | 2,228  | 1,556  |
| 건 설 | 1,315  | 1,256  | 910    | 819    | 508    |
| 기 타 | 7,160  | 6,762  | 4,858  | 4,532  | 6,748  |

주 : US\$1 = 2.15원

출처 : 북한 당국의 IMF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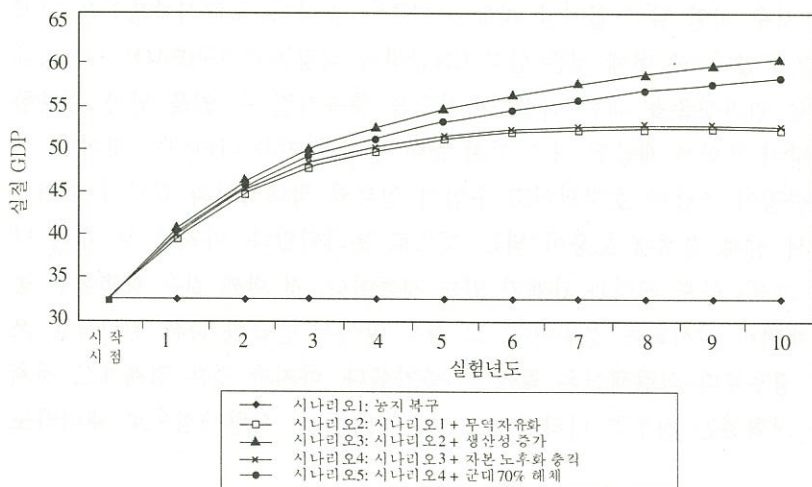
## 경제개혁의 효과

지금까지 서술한 부분이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다. 마이너스 성장, 기근, 만성적 무역적자, 그리고 非농업부문의 와해 등이 북한경제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경제가 만일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시도한 분석모형은 경제학자들이 ‘比較靜學’이라 부르는 모형들이었다. 즉, 한 경제에 어떤 임의의 변화를 줄 때 어떤 결과를 낳는 지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시간차원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그림 3〉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선들이 있다. 첫 번째 선은 바닥부분을 평평하게 지나가고 있다. 이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토지와 농업자본

이 복구될 경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이다. 이것이 협의의 농업 개혁에 따른 효과이다. 보시다시피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여 거의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이다.

〈그림 3〉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 10억 북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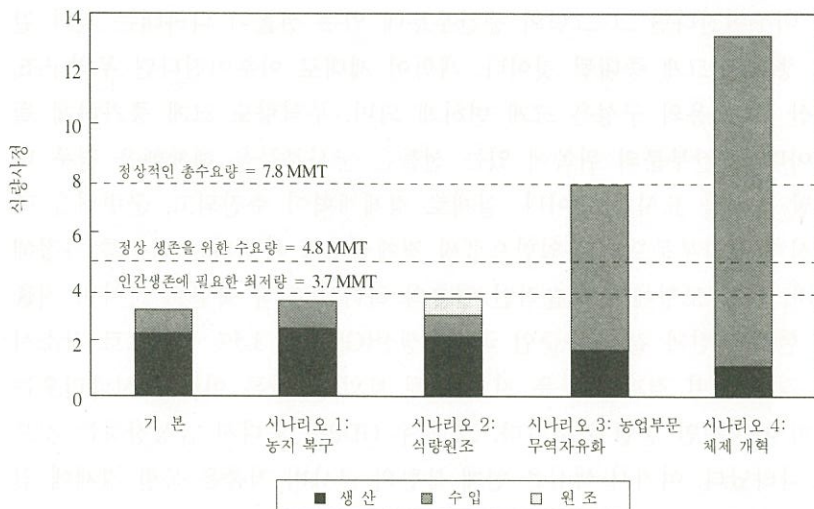


국제무역개방, 국내 왜곡요인 축소 등을 포함한 보다 체계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 그림의 중간부분에 있는 선들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생산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무역구조, 생산 및 고용의 구성은 크게 변하게 되며, 무역량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중간부분의 위쪽에 있는 선들은 군사부문을 해체했을 경우 나타날 충격을 표시한 것이다. 실제로 경제개혁이 추진되고, 군병력을 축소시켜 생산부문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우리 모형에서 학습적인 연습의 하나로 만약 북한이 군사비 지출을 현재 남한과 같은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감소시킬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자문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단지 가상의 실험일 뿐이다. 그 경우 GDP는 또다시 급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핵심은 현재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북한 경제에 엄청난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더 좁은 문제라 할 수 있는 식량사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그림 4>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1997년의 실제상황을 나타낸다. 즉, 얼마만큼의 식량을 생산했으며, 또 얼마만큼의 식량을 수입했는지를 추정해 놓은 것이다. 두 번째 막대 그래프는 농지복구에 관한 것이다. 즉, 홍수피해를 입은 농토가 그 이전의 생산력을 회복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식량생산은 크게 증가하였다. 세 번째 것은 만약 UN산하의 식량농업기구(FAO)가 설정해 놓은 인간생존을 위한 식량소비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이 북한에 제공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식량사정이 조금만 호전되어도 수입의 일부와 국내생산의 일부가 줄어들면서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두 개의 막대 그래프들도 개혁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첫 번째 것은 광범위한 농업개혁이 실시되는 경우이다. 그 경우 앞에서 언급한 다른 전략들을 쓰는 경우보다 식량생산은 훨씬 더 증가했다. 마지막 것은 경제제도 전체를 개혁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 편익을 국내 식량사정으로 재더라도

<그림 4> 식량 사정

(단위 : 백만 메트릭톤)



좁게 농업부문만 개혁하는 경우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기근문제는 결국 곡물생산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없다는 사실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북한처럼 연간 농경기간이 짧고 경지면적당 인구비율이 매우 높으며 기타 다른 여러 불리한 농업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완전한 식량자급을 시도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경제정책이 될 수가 없다. 경공업상품을 생산,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호주나 미국 또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로부터 식량을 구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보다 득이 될 것이다.

다음 그림은 이들 개혁전략들과 연계되어 경제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개혁은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 그림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은 경공업 생산이다. 만약 경제개혁이 추진될 경우 북한의 경공업 생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북한은 이들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기계공구(工具)나 자본재 등 몇몇 부문은 생산면에서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산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이들 제품은 한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유리할 것 같다. 식량생산도 같은 이유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농업노동력을 건설이나 경공업부문으로 전환하고 일부 주요 식량은 외국에서 사들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 결과 개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물 및 고용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現북한정권은 이러한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아마도 통치기반을 크게 동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것이 몰고 올 대규모 변화를 감안할 때 아마 그들의 우려는 정확할 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그러한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요점은 매우 간단하다. 계획경제국가들의 노동력 분포를 나타내는 <표 2>의 마지막 두 줄은, 중국과 베트남이 경제개혁을 시작했을 때를 표시하고 있다. 당시 양국에서는 노동력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 데이터의 수집 방식이 전혀 달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구의 30~35% 정도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즉, 현재 북한의 농업인구비

중은 개혁을 시작했던 당시의 중국이나 베트남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표 2〉 개혁기의 노동력 분포

| 국 가                 | 연 도  | 부 문             |                 |     |
|---------------------|------|-----------------|-----------------|-----|
|                     |      | 농 업             | 공 업             | 서비스 |
| 체코 공화국 <sup>1</sup> | 1989 | 11 <sup>a</sup> | 39              | 50  |
| 슬로바키아 <sup>1</sup>  | 1989 | 15 <sup>a</sup> | 34              | 51  |
| 폴란드 <sup>1</sup>    | 1989 | 7 <sup>a</sup>  | 37              | 56  |
| 헝가리 <sup>1</sup>    | 1990 | 15 <sup>a</sup> | 36              | 49  |
| 구소련 <sup>2</sup>    | 1987 | 19 <sup>a</sup> | 38 <sup>b</sup> | 43  |
| 우크라이나 <sup>3</sup>  | 1990 | 20              | 40              | 40  |
| 벨라루스 <sup>3</sup>   | 1990 | 20              | 42              | 38  |
| 루마니아 <sup>1</sup>   | 1990 | 28 <sup>a</sup> | 38              | 34  |
| 불가리아 <sup>1</sup>   | 1989 | 19 <sup>a</sup> | 47              | 34  |
| 북 한 <sup>4</sup>    | 1993 | 33              | 37              | 30  |
| 중 국 <sup>5</sup>    | 1978 | 71              | 15              | 14  |
| 베트남 <sup>2</sup>    | 1989 | 71              | 12              | 17  |

주 : (a) 농업과 임업

(b) 공업과 건설업

- 출처 : (1) Commander, Simon and Fabrizio Coricelli. 1995. Unemployment, Restructuring, and the Labor Market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Washington: World Bank. Tables 1.1, 2.2, 3.5, 5.1 and 6.11.
- (2) Eberstadt, Nicholas. 1995. Korea Approaches Unification. Armonk: M.E. Sharpe. Table 6.
- (3) Bosworth, Barry P. and Gur Ofer. 1995. Reforming Planned Economies in an Integrating World Economy.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Table 3-1.
- (4) Eberstadt, Nicholas. 1998. Quantitative Comparison of Current Socio-economic Conditions in North and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Project conference on Nation-Building for Korean Unification, Honolulu, Hawaii (21-25 Jan).
- (5) Sachs, Jeffrey and Wing Thye Woo. 1994. "Structural Factors i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Policy. 18: 101-145. Table 2.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은 농업부문에 대규모 잉여노동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힘입은 바가 크다. 즉, 농업부문을 자유화시켜 농업생산을 큰 폭

으로 증가시키고, 생산성이 극히 낮은 노동력을 농업부문에서 새로이 출현하는 非국영 경공업부문으로 흡수시킬 수 있었다. 이론상으로는 신흥 부문에 세금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낚고 둔중한 국영기업들을 개혁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양국은 두 번째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개혁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부문의 잉여노동력 때문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사정은 루마니아나 혹은 舊소련연방을 구성하던 국가들과 유사하다. 북한은 훨씬 공업화된 나라이다. 이런 나라의 경제개혁은 농업국가의 경제개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개혁효과 중의 하나는 국제무역이 크게 증대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외교역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교역의 2/3 이상이 현재 북한이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기술한 것처럼 부강하고 민주적인 국가인 한국이라는 존재는 북한내의 개혁을 지향하려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사상적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시장중심의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면 독립적인 한국가로서의 북한의 존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통일이 되면) 바로 한국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3등짜리 한국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북한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할 것 같다.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신호들도 이런 생각을 더욱 굳혀주는 것들이었다.

### 남북통일이 남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그렇다면 만약 개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사회의 물질적 기초가 계속 축소되고, 북한경제가 북한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하나의 가능성은 체제붕괴이다. 독일의 경우가 좋은 비교대상이 된다. 이점에 대해 여기서 더 상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와 한국으로의 흡수가 남북한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 지에 대해 우리가 구축

한 모형을 통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간에 오직 교역만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이미 전술한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런 교역이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조그마한 동유럽국가나 발틱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유사하다. 즉, EU에 새로 가입하는 소규모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반면에 기존 EU회원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영향은 아주 사소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들 수 있다. 멕시코에게 있어서 이 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미국과 같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갖는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영향은 거의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정도로 미미할 것이다. 이상은 남북한이 단순히 통합되고, 또 무역만이 이루어질 경우 나타날 결과를 간략히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국경을 넘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일단 노동과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하면 한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충격은 매우 크게 된다. 남북한을 연계시키는 경제모형을 통해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남북한간의 모든 장애가 제거되어 양국이 통일이 될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인은 북한지역으로 유입될 예상투자규모와 북한지역으로부터 내려올 이주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한국에서 나온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남북한간의 자본이전 정도, 기술수준의 수렴정도 등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에서는 한반도의 성장패턴이 각각 다르게 나왔다.

본인은 그 모형을 사용하여 통일이후 10년간 남한의 국민소득을 현재 가치로 추정하였다. 여기에는 자본과 노동의 남북한간 이동의 정도에 따라 8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이 내용들은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만큼 학문적이며, 사실 이미 학술논문 형태로 발간되었다. 여러분들도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남한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얼마나 되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이러한 분석을 한 후 본인은 이 남북한연계 모형을 변형하여 남북한의 통일이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관련 문헌으로부터 나온 계수들을 사용하여 이 모형을 돌려본 결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정말 깜짝 놀랐다. 그 시나리오는 통일 후 남한경제는 통일전과 비교해 실질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시나리오는 북한주민들이 대규모 남한으로 이주하는 반면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민간투자유입은 소규모에 그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북한 쪽으로의 민간투자가 소규모에 그칠 경우 남한의 투자기업들에게 이윤이 발생하고, 그 이윤이 다시 남한 경제로 보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남한의 미래소득흐름의 현재가치는 통일이 없는 경우에 비해 350억 달러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론 나머지 일곱 개의 시나리오에서는 남한경제가 통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나타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남한의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보다 무려 약 5천억 달러나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점만 간단히 기술한다면, 통일이 남한경제에 이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 득실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통일이나 경제통합이 일어날 경우 실제로 적용될 정책들이 양국 경제에 미칠 충격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한국에 주는 충격에 대해 몇 가지 부언하고자 한다. 상기한 모형을 이용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의 하나는 소득분배와 같은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남한만을 대상으로 통일 후의 소득분배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노동에서 자본으로, 또 노동 내에서는 보다 높은 기술을 가진 집단으로 소득분배가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과의 경제통합 혹은 정치적 통일이 남한에는 소득재분배효과를 야기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보완정책이 없을 경우 남한내 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환율조정 등에 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과정에 외자유입이 수반되어

실질환율의 절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가 사용한 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서독의 경우처럼 한국에 대한 충격 가운데 하나는 교역재 부문에서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非교역재 부문은 유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일이나 경제통합 과정에서 남한에 또다른 잠재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의 요점은 만약 상황이 우리가 가정한 대로 전개되고, 또 여러분이 통일채권에 투자할 충분한 여유자금을 가진 남한의 건설부호라면 아마도 통일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다. 반면 만약 여러분이 남쪽 지방에 위치한 몇몇 低기술산업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라면, 통일은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결언

결국 이러한 결과들이 말해주는 것은 개혁은 북한에게 매우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어느 국가들도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붕괴 사태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별다른 묘책없이 現상황을 고수하면서 외화획득을 위해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 금강산개발계획 등과 같은 일과성 프로젝트들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위협과 강압을 사용하여 외부세계로부터 자원을 강제 수탈하는 행태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과 서방세계로부터의 원조에도 계속 의존하게 될 것이다.

## 질의 · 응답

**질문** 놀랜드 박사가 멕시코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주한 멕시코대사로서 박사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먼저, 멕시코는 북한과 외교 및 통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이다. 1994년 본인이 한국으로 부임했을 당시, 멕시코가 북한과 교역을 할 뿐 아니라 북한 역시 멕시코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기업들이 가끔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멕시코에 투자하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멕시코에 대한 투자액은 그 규모 면에서 한국에 별로 뒤지지 않는 수준에 있다.

무역에 관한 한, 남북한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과 멕시코를 비교할 수 없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멕시코는 미국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이는 캐나다보다는 뒤지지만 일본보다는 앞서는 것이다. 멕시코와 미국간의 교역량은 연간 1,000억 달러 가까이 된다. 멕시코의 대미 수입액은 중남미 국가들의 수입액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많으며, 유럽과 비교해서도 독일과 영국의 대미수입액의 합계액보다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는 이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북미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우려한다. 최근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일본 및 중국의 방문과 함께 남한 정부가 미국으로 하여금 외교관계 수립과 對북한 수출금지조치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박사가 보시기에 미국이 얼마나 오래 동안 북한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용인할 것으로 보는가? 이라크나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그 위협은 현재 북한이 가하고 있는 것보다 수위가 낮았다.

**답변** 멕시코 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약간 다른 예를 들었을 것이다. 대사의 첫번째 논평부분에 관련하여 본인이 얘기하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매우 작는데, 이 통계 수치에 기재상의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무역규모

나 무역구조 등을 분석하려고 하면 그 오차가 실제 수치를 압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상당수 국가들의 통계국이나 중앙은행에서는 경력이 1~2년 정도 밖에 안된 하위직 직원들이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했다. 그들은 남한의 무역을 북한의 것으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북한통계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예는 오스트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멕시코, 그리고 최근에는 레바논에서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이런 자료를 다룰 때에는 매우 세밀한 주의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거의 매해마다 남북한 통계를 뒤바꾸어 잘못 기재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데이터는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된다. 북한이 별안간에 어떤 해에 실제로는 남한이 했을 것 같은 16메가바이트 D램의 큰 수출국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북한 데이터들을 다룰 땐 이런 점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본인은 실제로 자료원을 추적해 멕시코시티의 한 젊은 정부직원이 남북한을 완전히 혼동한 경우를 밝혀 내기도 했다.

예로 든 NAFTA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관세동맹 혹은 자유무역지역이 결성될 경우 다른 회원국들보다 현저하게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게 그런 동맹이 주는 거시경제적 영향은 매우 작다는 것이 나의 요점이다. 그것이 전부다. 미국에게 멕시코와의 교역이 중요시되지 않는다거나 멕시코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본인은 텍사스에서 자랐다. 따라서 멕시코가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잘 알고 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NAFTA에 가입했다고 해서 미국의 GDP나 실업률이 갑자기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뿐이다. 미국경제에 주는 거시경제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NAFTA 가입은 별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는 전부이다.

북한의 정책과 미국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위험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북한 내부의 정치역학이 북한을 ‘벼랑끝 전술’이나 대외 위협전략 쪽으로 자꾸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개입정책을

위한 국내정치적 합의를 유지하는데 매우 서툴렀다. 특히, 의회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큰 시각 차를 드러냈다. 솔직히 말해, 상당수의 美 의회 의원들은 그 중 일부 의원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북한내 핵활동 재개문제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미 하원은 지난번 예산위원회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뻔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다. 그러나 그 예산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극우익 성향을 갖고 있는 공화당 외교정책 담당 의원들 덕택이다. 그들은, KEDO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이 KEDO에의 지원을 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지원중단이 함축하는 뜻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들어 지원을 반대하는 그룹들을 겨우 설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하원은 그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과 對 북한정책을 위해 특별 조정관을 임명한다는 단서를 달아 차기 일년동안 KEDO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전 국방장관 페리씨가 그 특별 조정관에 임명되었다. 그의 주요 임무는 향후 약 6개월에 걸쳐 현재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 혹은 제도를 바꿀 것인가에 관해 국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또 미국내 합의를 이루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간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일이다. 지난 6개월간의 그 과정은 복잡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남북간의 관계개선책인 햇볕정책을 추구해온 반면 미국 하원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표류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한미간의 이견은 1998년 8월 일본 상공으로 로켓이 발사되고,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더욱 커졌다. 따라서 현재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미국내 정치적 합의를 재건하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간에 긴밀한 정책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쏟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물자원조에 관한 한, 미국에서는 일종의 ‘기부자 피로(Donor fatigue)’

가 심해지고 있다. 이는 개혁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채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계속한 결과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인상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다. 미국이나 유럽이 지쳐 있을 때에는 위험성이 높은 전략들을 추구하고 싶다는 결정을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위험성이 높은 전략들은 서울이나 동경, 심지어 북경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르게 보이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정치권이 북한의 행태에 대해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한국과, 그 다음으로 일본과 중국과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어떤 무모한 조치를 설했던 그런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취할 것 같지는 않다.

**질문** 1960년과 비교해서 1990년의 북한의 1인당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북한의 외채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방식의 상환계획을 갖고 있는가?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이 있으며, 북한은행들도 혹시 구조조정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 1960년과 1990년의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경제의 국민소득수치를 계산하거나 1인당 소득을 추정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시간낭비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는 너무 왜곡되어 있어서 시장경제에서 국민소득계정 집계는 기초가 되는 가격이나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본인도 시도해 보았지만 물리적 수치로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둘째, 만약 질문자가 북한의 변형이나 가계복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은 국민소득 중 군사비의 비중이 매우 커서 1인당 국민소득을 주민들의 실질복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게 되면 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더 직접적인 지표, 예를 들면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이나 평균수명 같은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부유한 국가가 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나라

의 기술수준, 예를 들면 군사기술수준을 알고자 한다면 그 부문의 관련 사항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북한의 국민소득이나 1인당 소득을 추정한 한국 학자들에 따르면, 1960년의 북한의 1인당 소득은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미국 CI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970년대의 어느 시점까지도 북한보다 낮았다. 심지어 고려대학교의 황의각 교수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 중반까지도 북한보다 낮았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한 숫자들에 큰 비중을 주지 않는다.

외채 역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舊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 대해 많은 외채를 지고 있다. 그러나 그 외채는 결코 상환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에 대해 북한이 지고 있는 외채처리를 위해 몇가지 방안들이 고안되기는 했지만 그 계획들은 말 그대로 형식에 그친 것들뿐이었다. 북한은 또한 서방 은행들에게도 외채를 지고 있는데, 이들은 벌써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지 오래다. 그 액수는 약 4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채권들은 현재 2차 자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본인은 그 채권의 거래가격은 북한 경제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逆지표라고 말한 시장참여자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만약 북한이 붕괴될 것 같으면, 그 채권의 가격은 오르게 된다. 이는 북한이 붕괴되면 한국이 그 채권을 상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인이 북한의 금융부문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한국의 경제학자 김병주 박사로부터 배운 것들이다.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북한내 은행은 몇 개되지도 않으며, 그 은행들의 상황이 어떤 지 잘 모르겠다. 북한에는 두 개의 외국은행들이 있었다. 그 하나는 페레그린은행인데, 지금은 이미 파산했다. 네덜란드계 은행인 ING은행은 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그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본인에게 북한 은행들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얘기해 주었다. 금융부문의 예금인출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기본적으로 물물교환이나 현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제도가 지불과정에서 결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질문** 북한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놀랜드 박사의 모형으로부터 나온 결과들을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마치 舊소련에서처럼 공산당은 종종 선전목적으로 통계수치를 변조시키곤 했다. 박사가 모형추정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들인가?

**답변** 매우 타당한 질문이다. 본인이 아는 한 북한에서 나온 데이터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수준이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데이터의 정치화가 하나이다. 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한 북한의 공식적인 정부자료는 각기 다르다. 북한 정부는 UN에 약 6개월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에 관한 두 가지 추정치를 제출했다. 그 두 추정치간에는 1/3~1/4 정도 차이가 날 정도이다. UN 분담금 결정에 사용될 두번째 추정치는 매우 작았다. 그러나 북한만이 이러는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런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그 큰 차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형 작업을 할 때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한다. 이런 기법들을 잘 결합하면 데이터가 조각조각 흩어져 있거나 큰 측정오차 등으로 변질되어 있는 경제를 정밀하고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도 신축적인 방법이 된다. 우리는 실제 잘 쓰이지 않는 대내적 일관성을 가정한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모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데이터들을 어떻게 구축했을까? 우리는 소위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이라 불리는 것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 행렬들은 산업간의 관계라는 형태로 경제내 모든 거래를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추적한다. 우리는 북한과 한국 그리고 가능한 모든 출처로부터 제각기 수집된 데이터들에 기초해서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했다. 어떤 데이터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는 순전히 추측에 의한 것도 있었다. 때때로 그것은 상대적이다. 즉, 어떤 수치는 다른 것보다 더 크거나 작아야만 하고, 어떤 두 수치는 다른 항목으로 합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행렬을 구성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 나갔다. 물론 그 데이터 가운데는 정확한 것도 있고, 거의 정확할 것 같

은 것도 있고, 완전히 추측한 것도 있었다. 그런 후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Cross-entropy)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입력된 데이터들이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성가신 기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나은 것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자료는 내부적 일관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국제통화기금에 제출한 데이터 중에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회계원칙조차 무시한 것들도 있었다.

여러분은 이것을 모든 조각들이 서로 꼭 들어맞지 않는 일종의 퍼즐(Puzzle)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조각들로부터 일부 정보를 뽑아내었다. 이 추정기법은 그 퍼즐의 특정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하면 전체 퍼즐로부터 일관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측치 형태로 투입된 조각들의 일부를 약간 잘라냈을 때 전체가 일관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되는 부분을 잘라내 버렸다.

북한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입력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즉, 그 행렬을 만들기 위해 과거에 했던 작업들을 기초로 하여 봤을 때 전체 그림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생산량 수준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국제통화기금에 준 통계수치들 중 상당수가 중앙계획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제부분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치들은 군사 및 비공식 부문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그 두 부문은 중앙계획경제부문에 비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생산량 수준을 작게 평가할 경우 더 많은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동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군사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고려하여 생산량 크기를 약간 높게 잡으면 나머지 사회회계행렬은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갖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의 부분적이면서도 부정확한 각종 데이터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한 방식이다.

**질문** 박사는 북한 경제에 대해 진짜 과학적이면서도 학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몇 명 안되는 학자들 중의 한 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계수치를 당연한 것으로 믿고 다른 연구를 시작한다. 먼저, 박사는 북한의 무기거래에 관한 통계를 갖고 있는가? 또한 무기거래는 북한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둘째, 페리 전 미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국정부가 권고한 것처럼 한국은 북한에 대한 협상안을 일련의 패키지로 한데 묶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과의 안건을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어 왔다. 박사는 이런 포괄적인 협상이 지금까지 보다 더 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내 생각으로는 북한과 미국간의 맞대결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답변** 처음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이란-이라크전이 벌어졌던 80년대 북한은 두 국가 모두에게 무기를 판매하면서 무기수출이 절정에 달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북한은 소련과 여전히 좋은 관계에 있었고, 소련으로부터 많은 군사장비와 무기설계도를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렇다할 큰 전쟁이 없어 고객이 줄어든 데다가 무기보유규모를 줄이려는 舊동구권 국가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북한의 무기무역은 찬바람을 맞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CIS 공화국들도 더 이상 무기설계도를 공급하지 않자 북한이 판매해 왔던 무기들의 설계는 점점 구식이 되어 쓸모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수출은 실질적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그런 경제상황 때문에 수입도 줄었다. 세계무기규제기구(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의 자료가 맞다면-본인은 그 기구가 어떻게 북한 데이터를 입수했는 지 전혀 모른다-현재 북한의 무역규모는 비교적 작고, 또 북한은 이제 무기의 순수입국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미사일판매 문제가 있다. 본인은 그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다.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알고 있는 정도이다. 현재의 기술수준과 가격정책, 그리고 북한 군부가 자체 무역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은 아마도 재래식 스커드 미사일의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 온 것 같다. 북한이 중동이나 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판매하는 꽤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 북한의 무

기거래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이다.

다음은 포괄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미국은 스스로를 북한과 사이가 아주 나쁜 상황에 빠지게 했다. 미국은 4자회담, 핵확산금지 협상, 미사일협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장소가 여러 곳이라는 말이다. 이런 모든 협상마다 거의 매번 거론되는 것이 미국의 식량원조 제공문제이다. 미국은 ‘평화를 위한 식량(Food for Peace)’이라는 잘 알려진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지금 쓰고 있는 저서에서 이 ‘평화를 위한 식량’에 관하여 하나의 장(章)을 할애하였다. 사실 그 제목을 ‘회담을 위한 식량(Food for Meetings)’으로 바꾸어야만 할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의 회담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매번 식량을 주었다. 물론 이 때문에 북한은 여러 가지 회담을 아무런 결론 없이 질질 끌게 만드는 동기를 갖게 되기도 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과 북한간의 쟁점들의 주요 원천에 관한 것이다. 만약 북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그 쟁점들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미국은 제네바 합의 사항중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약속했던 대북한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으며,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일이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일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본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현재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재는 실질적으로 북한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은 많다. 對북한 제재는 북한정부로 하여금 그들은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러므로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줄 뿐이다.

동시에, 본인이 접촉했던 북한 경제관료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야말로 북한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었다. 본인은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제재조치의 해제를 지지한다. 문제는 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을 방문했을 당시 對북한 제재조치가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점이다. 이는 북한의 불순한 행동을 응징한다는 차원에서였다.

문제는 1997년 일년 동안 북한이 많은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현재 보복조치로 취해진 對북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아니면서 미국이 아량을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결국, 미국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입장에서는 단지 관용의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 북한입장에서는 핵사찰과 같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점을 미국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다른 핵도발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함직도 하다. 이것은 쌍방간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페리 前장관이 대규모 포괄 협상안을 내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미국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포괄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포괄협상이 이루어지면 매우 좋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지 크게 의심이 간다.

**질문** 박사의 논문에 있는 네번째 시나리오에 의하면 북한이 경험한 자본노후화에 따른 충격이 GDP의 약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인은 자본노후화가 실제 측정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나아가 다섯번째 시나리오에 의하면 GNP 성장은 세 번째 시나리오보다 낮았다. 군사비 지출삭감을 통해 그 충격이 줄어들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면 자본노후화로 인한 부정적인 순효과가 군사비의 70%를 감축한데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크다고 가정해야 할까? 박사는 어떻게 이런 추정치를 계산했는가?

둘째, 북한이 현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목적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사비 지출의 삭감은 어떤지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박사의 생각은 어떤 지 알고 싶다.

**답변** 본인은 98년 11월중 이틀 동안 지금 질문한 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가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영어로 된 내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그래서 본인이 워싱턴에 돌아가 6인치 정도 두께가 되는 일련의 연구논문들을 질문

자에게 보냈다. 질문자는 아마 그 내용을 모두 읽은 것 같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함축하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이 있다. 경제개혁은 많은 서로 다른 효과를 낸다. 우리 모형에서는 이들을 각기 다른 개별효과로 분해했다. 그 중 하나가 무역자유화이다. 무역이 자유화됨에 따라 생산요소들이 재분배되고, 경제는 성장한다. 만약 무역자유화가 추진되어 해외에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자본장비들이 북한으로 수입되면, 혹은 만약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남한이 북한에 투자하고 새로운 경영기업들을 북한에 전수하게 된다면 북한의 생산성, 좀더 구체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해 이러한 변화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들을 알고 있다. 우리가 하는 특별한 가정들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는 다르게 나타났다.

자본노후화에 따른 충격정도를 재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의 현자본스톡은 심하게 왜곡된 가격체제와 외부세계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제품들을 기초로 설계되고 건설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겠지만 일단 경제개방이 이루어져 국제표준이 채택되면 표준차이로 인해 그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쓸모 없게 될 것이다. 특정 제품생산용 자본장비가 있겠지만 이들 제품들은 세계시장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튜너가 없는 라디오나 TV를 생각해 보라. 그런데 이 두 제품들은 북한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다.

동독경제가 개방되었을 때, 동독 자본스톡의 반 내지 2/3 정도는 국제가격으로 보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우리가 전에 돌렸던 모형에서 이와 거의 같은 수치들을 얻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이미 상당한 양의 자본시설을 헐어서 고철로 중국에 팔고 그 대신에 식량을 구입하는 바터 무역을 해왔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자본노후화에 따른 충격은 다소 작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그것을 25%로 가정했다. 그래서 생산성 증대효과와 기술이전효과를 우리 모형에 결합하면 우리는 일련의 추정치와 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음은 군사비 지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단지 연습삼아 해 본 것

이지 미래예측을 위해 한 것은 아니었다. 군사비 지출이 경제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지 感을 얻기 위해 군사비를 GDP의 3.5%로 줄였다. 우리는 현재 북한의 군사부문은 국민총생산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사부문에 투입된 總근로시간의 절반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부문에 해야 할 활동, 예를 들어 도로건설, 농작물 수확 등과 같은 부문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제거했다. 우리가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참호 안에서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정한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은 GDP의 12~13%이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인력과 장비를 다른 부문의 경제활동에 투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만약 군사비 지출을 줄이게 되면 GDP의 약 18%에 달하는 평화배당금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3.5%라는 숫자의 선택은 자의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지적인 연습의 하나로 해 본 것이다. 만약 외교환경이 북한이 군사부문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은 그렇게 할 것인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북한 내부의 정치역학과 외교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번 실험삼아 해 본 것이지, 미래의 행태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질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한국에 있는 사람들조차 북한도 곧 붕괴될 것으로 예측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한국정부의 많은 고위관리들은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그럭저럭 버텨내고 있다. 놀랜드 박사가 보시기에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가?

**답변** 1997년 12월 29일 원화가 美달러당 1,950원까지 올랐을 때, 본인은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개인 돈으로 뉴욕증권시장에서 한국전력 주식예탁증권을 샀다. 일년이 채 안된 지금 그 돈은 배이상으로 불어났다. 나는 만기가 5년 이상인 북한채권은 사지 않겠다.